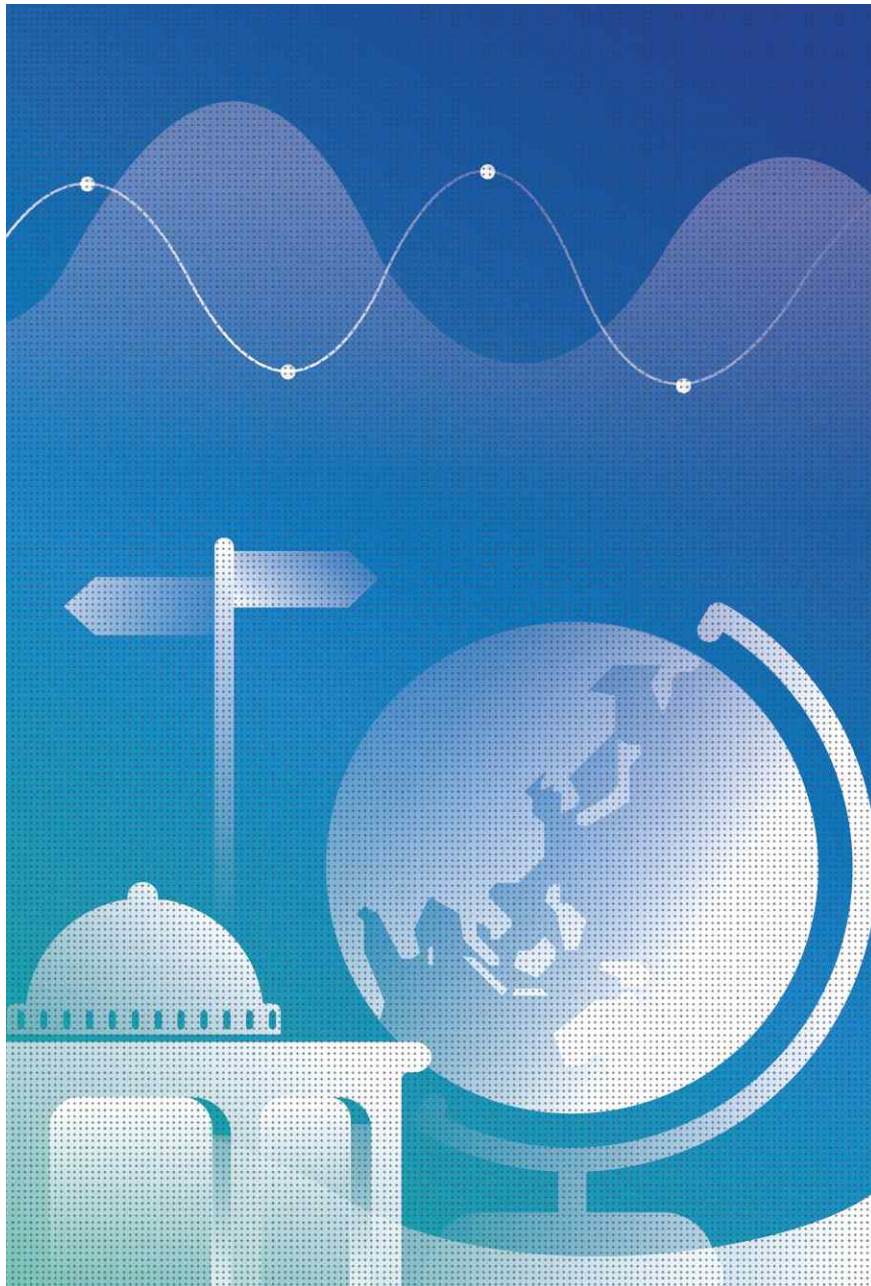


이슈보고서

지역연구팀

VOL.2020-지역이슈-4(2020.08)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와 미·중 갈등 심화



CONTENTS

- I. 중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 II.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대한 미국의 대응
- III. 미국 정부의 조치가 홍콩 경제에 미치는 영향
- IV. 전망 및 시사점

작성

책임조사역 이주은 (6255-5706)

June@koreaexim.go.kr



* 본 보고서는 한국수출입은행 뉴욕사무소, 워싱턴사무소, 북경사무소, 상해사무소 및 아주금융유한 공사의 조사보고서 내용을 바탕으로 국내외 조사기관 자료 등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I. 중국 전인대,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중국 전국인민대표회의(전인대), 6월 30일 홍콩 국가보안법 가결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는 5월 28일(이하 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이하 “홍콩 보안법”)의 직접 입법을 위한 결의안을 찬성 의결하고 6월 30일 상무위원회에서 홍콩보안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동 법은 시진핑 주석의 서명과 홍콩 기본법 부칙 3조에 추가하는 절차를 거쳐 같은 날 밤 11시부터 즉시 시행되었음(<표1> 참조).
- 2003년 홍콩의 입법기구인 입법회가 홍콩보안법 입법을 추진하였으나 시민들의 거센 반발로 무산된 바 있음. 일국양제를 보장하는 홍콩 기본법에 따라 홍콩이 갖는 자치권에도 불구하고, 중국 정부는 지난해 홍콩 시위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여 전인대를 통한 홍콩보안법의 직접 입법을 추진함.

<표 1> 홍콩 반환부터 홍콩보안법 통과까지 주요 사건 일지

시기	주요 내용
1984.12월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체결, 반환 이후 50년간 일국양제 유지 합의
1997. 7월	홍콩 반환
2003. 9월	홍콩 입법회, 대규모 시위와 야권의 반발로 홍콩보안법 제정 실패
2014. 9월	홍콩 민주화 운동 및 우산 혁명
2019. 3월	범죄인 인도법(송환법) 반대 시위 ⇔ 홍콩 행정장관, 송환법 공식 철회
2019.11월	미국 의회, ‘홍콩 인권 및 민주주의 법안’ 통과 (1992년의 홍콩정책법에 따라 홍콩이 현재 누리고 있는 특별대우가 정당하지 미 국무부가 매년 확인)
2020. 6월	중국 전인대, 홍콩보안법 통과 및 발효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홍콩보안법을 통해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

- 홍콩보안법은 **외국 세력과의 결탁, 국가 분열, 국가정권 전복, 테러행위 등 4가지 행위에 대해서 최고 무기징역에 처하고, 경미한 범죄행위도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함.**
- 이에 따라 **홍콩의 독립을 주장하는 모든 행위는 처벌 대상이 되며,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사람이 홍콩 외 지역에서 이 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함.** 사실상 첫 시행일인 7월 1일에 300명 이상의 홍콩 시민이 동 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음.
- 또한, 홍콩보안법에 따라 설립된 홍콩 국가안전공서는 7월 6일 첫 회의를 열어 홍콩보안법 43조에 따라 집행당국의 권한에 대한 상세한 시행규정을 제정하였음.



- 동 시행규정은 의도적으로 모호하고 포괄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경찰에게 매우 큰 권한을 임의적으로 부여하고 있음. 구체적으로는 ▲'특수한 상황'에서 영장 없이 압수수색이 가능토록 하고, ▲국가안보를 해치는 것으로 '여겨지는' 메시지나 정보에 대한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행정장관의 승인을 받으면 보안법 피의자에 대해 **도청, 감시, 미행**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서비스 업체에 이용자 신원 확인 등 **정보제공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표2> 참조).
- 홍콩보안법 시행규정이 제정되자 일부 홍콩 시민들은 'X' 표시가 된 마스크를 착용한 채 백지를 들고 시위를 벌였음. 또한 홍콩 내 도서관들에서 홍콩 민주화 운동가들이 쓴 책의 대출을 금지하는 등 사상 검열이 노골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음.

<표 2> 홍콩보안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핵심 조항	외국·외부 세력의 어떤 방식의 간섭에도 결연히 반대하고 필요한 조치로 반격(2조) 홍콩 내 서방 외교관 추방 등 제재 가능(국제사회의 압력 차단)
	홍콩 특별행정구는 국가안보 수호 기구와 집행 기제를 설립해 국가보안법 집행 역량과 국가안보 수호 업무 능력을 강화(4조) 중국 중앙정부가 국가보안법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한 특별 검찰·정보기관을 홍콩에 설치 가능(중앙정부의 감시·통제 강화)
	홍콩 행정장관이 국가안보 교육을 실시하고 국가안보 침해 행위와 활동 금지 등 상황을 중앙정부에 보고(5조) 홍콩에 대한 중국 중앙정부의 통제력 강화
	전국민인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관련 법률을 제정해 국가 분열, 정권 전복, 테러, 외국·외부 세력이 홍콩 문제에 간섭하는 활동 등을 저지하고 처벌(6조)
근거법	홍콩 기본법(헌법) 23조
효과/문제점	① 홍콩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사법 통치력 강화 ② 개인에 대한 감시 강화, 야권 인사 탄압 ③ 국민들의 시위 참여 사실상 불가, 언론 자유 축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북경사무소



II.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에 대한 미국의 대응

홍콩보안법 발효 직후 미 의회 '홍콩 피난처법' 발의

- 6월 30일 홍콩보안법이 발효되자 같은 날 미국 공화당 및 민주당 의원들은 2019~20년 중 정치적 의사 표명이나 평화로운 정치활동 참여 등으로 박해 위협에 처한 홍콩 주민들을 난민으로 인정하고 미국의 난민 한도 적용(현행)에서 예외로 취급하는 '홍콩 피난처법'을 공동 발의함(<표3> 참조).

트럼프 대통령, 홍콩의 자치권 상실에 관여한 개인, 기관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을 제재하는 '홍콩 자치법'에 서명

- 트럼프 대통령은 7월 14일 홍콩의 자치권 상실에 관여한 개인, 기관 및 이들과 거래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를 명문화한 '홍콩 자치법'(Hong Kong Autonomy Act)에 서명하였음.
- 앞서 6월 25일 미국 상원을 만장일치로 통과한 동 법은 1984년 중·영 공동선언(홍콩반환협정) 및 홍콩 기본법에 보장된 홍콩의 자치권을 침해한 외국의 개인, 기관 및 이들과 거래한 외국 금융기관을 미 정부가 지정하여 미 의회에 보고토록 정하고, 이들에 대한 제재 부과를 의무화함. 구체적인 제재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지정된 외국인에 대해 미국 내 자산의 취득·보유·사용, 자산 관련 권리행사 및 거래 금지(개인의 경우 비자 발급 거부 또는 추방)
 -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①동 기관 앞 금융 제공 금지, ②미 국채 관련 주요 거래기관 지정 금지, ③미국 정부 대리인 또는 정부기금 관리 금지, ④외환거래 금지, ⑤자금이체 금지, ⑥자산의 취득·보유·사용, 관련 권리 행사 및 거래 금지, ⑦동 기관 앞 수출 및 국내 거래 금지, ⑧동 기관에 대한 지분 및 채권 투자 금지, ⑨관리자 및 주요 주주 추방, ⑩동 기관의 관리자에 대해서도 모든 제재 부과 가능
 - 동 법의 시행일로부터 90일 내에 해당 외국인 지정(국무부), 이로부터 60일 내에 해당 외국 금융기관 지정(재무부). 제재조치는 지정일부터 시행 가능(금융기관의 경우 1년 내에 5개 이상, 2년 내에 모든 제재 부과 의무)

트럼프 대통령,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 7월 14일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정부가 그동안 홍콩에 대해 부여해온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the President's Executive Order on Hong Kong Normalization)에 서명하였음. 동 명령은 중국 중앙 정부의 일방적인 홍콩보안법 시행으로 홍콩 반환협정이 보장하는 홍콩의 자치가 근본적으로 훼손된 것을 근거로 하여, 미국의 국가안보, 외교정책, 경제적 이익과 관련한 홍콩에 대한 차별적 우대*를 중단 및 폐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함.

* 미국은 1992년 제정된 미-홍콩 정책법(US-Hong Kong Policy Act)에 따라 무역, 관세, 금융, 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에 대해 중국 본토와는 다른 특별지위를 부여해 왔음.

- 미국 정부는 동 명령을 통해 미-홍콩 정책법 상 미국 이민법, 국적법, 무기수출관리법, 방산법, 수출관리개혁법 등 관련 내용의 적용을 중단 또는 폐지하였음.
 - (주요 조치) 홍콩 여권 소지자 우대 중단, 대 홍콩 수출허가 예외 취소, 방산물자 수출허가 유예 취소,



범죄인 인도협정 중단, 과학기술 협력 및 치안 관련 교육 협력 중단, Fulbright 장학생 프로그램 중단, 선박 국제운항 관세 면제 중단, 홍콩 주민에 대한 난민 수용한도 조정 등

- (제재) 홍콩 보안법의 제정, 시행 등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인사, 홍콩의 민주적 절차와 제도, 평화·안보·자치권을 위협하거나 표현·집회의 자유를 저해하는 행위에 관여한 인사의 미국 내 자산 동결
 - (시행) 행정명령일로부터 15일 이내 행정기관장들은 관련 규정 개정 등 시행을 위한 조치 개시 의무
 - 동 명령 발표 다음날인 7월 15일 중국 외교부는 즉각적으로 강력히 반발하며 성명을 통해 홍콩보안법은 중국 헌법과 홍콩 기본법에 부합하며, 일국양제와 홍콩의 장기적 번영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는 한편, "홍콩은 중국의 특별행정구로, 홍콩의 사무는 중국 내정이며 외국이 간섭할 권리가 없다"며 "미국이 계속 고집한다면 중국은 반드시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혀 보복을 예고하였음.
 - 한편, 관심의 대상이었던 **홍콩달러 페그제**의 폐기 또는 약화를 위한 조치는 특별지위 부여와는 무관* 하여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미국 기업이 입을 피해 등에 관한 우려로 검토 자체를 중단한 것으로 알려짐.
- * 홍콩달러 페그제는 미-홍콩 정책법('92년) 제정 전부터 시행('83년)된 제도로, 미국이 부여한 특별지위와 무관한 사안임(<박스> 참조).

<표 3> 홍콩보안법 도입 및 미국의 대응 관련 주요 일지

일자	주요 내용
5.21	중국 정부, 전인대 전체회의 개막 전일 기자회견에서 홍콩보안법 입법 추진 발표
5.27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 홍콩이 고도의 자치권을 누리지 못한다고 의회에 보고했음을 밝혀 홍콩의 특별지위 박탈 시사
5.28	중국 전인대 전체회의, 홍콩 국가보안법 입법 결의안 압도적 찬성으로 채택
5.29	트럼프 대통령, 홍콩에 부여한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발표
6.30	홍콩 국가보안법 발효
	폼페이오 국무장관, 홍콩 특별지위를 '거의 예외 없이' 제거할 것이라고 발표 미 의회, 정치적 박해 위협에 처한 홍콩 시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 홍콩 피난처법 ' 발의
7.14	트럼프 대통령, 홍콩 자치권 상실에 관여한 기관 등을 제재하는 ' 홍콩 자치법 '에 서명
	트럼프 대통령, 홍콩의 특별지위를 박탈하는 행정명령 에 서명

자료: 필자 정리



< 박스 >

홍콩달러 페그제 폐기 관련 이슈

트럼프 정부의 홍콩 특별대우 박탈 행정명령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홍콩달러 페그제 폐기 내용은 제외

- 홍콩달러 페그제*는 홍콩달러화를 미 달러화로 환차손 없이 무제한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하여 홍콩이 아시아 금융 허브의 지위를 유지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함.
 - * 홍콩은 1983년부터 홍콩의 중앙은행 격인 **홍콩금융청**(Hong Kong Monetary Authority: HKMA)을 통해 홍콩달러 페그제를 유지(USD1=HKD7.75~7.85)
- 7월 7일 블룸버그 뉴스는 트럼프 행정부 고위 인사들이 홍콩보안법 제정에 따른 대 중국 제재조치의 일환으로 홍콩달러 페그제를 약화시키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하였음.

※ 미국 정부가 홍콩달러 페그제를 약화시키기 위해 사용 가능한 수단

- ① 중국계 은행에 제재를 가하여 미국과 글로벌 금융기관들의 홍콩과 중국 기업들에 대한 달러 공급 제한
- ② 미 재무부가 미국 은행들의 홍콩 및 중국 은행 달러 자금조달 거래 참여를 금지
- ③ 미 FRB가 HKMA의 FIMA Repo Facility* 사용 승인을 철회
 - * FRB가 외국 외환당국 등이 보유한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빌려주는 정책
- ④ 미국 은행과 기업들에 홍콩달러 익스포저를 줄이도록 강제하여 홍콩달러 수요 감소 유도 등

전문가들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업, 은행 및 국제금융시장에 미칠 부정적 영향, 페그제에 대한 공격이 실패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페그제 폐기를 단기 옵션에서 배제한 것으로 추정

-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 홍콩달러 페그제가 붕괴될 경우 국제금융시장 전체가 불안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홍콩에서 영업 중인 미국 금융기관과 기업들이 큰 손실을 입을 수 있음.**
- (실패 가능성) 홍콩달러 페그제 폐기 시도가 실패할 경우 국제금융시장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한 비판으로 미국 정부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있음.
- HKMA는 홍콩달러 발권액의 2배에 달하는 **4,400억 달러의 외환을 보유하고** 있어 홍콩달러 전체를 미 달러로 환전할 수 있으며, 유사시에 세계 최대 외환보유국(3조 달러)인 중국에 미 달러화 공급을 요청할 수도 있음.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뉴욕사무소



휴스턴 중국 총영사관 폐쇄, 중국의 청두 미국 총영사관 폐쇄 맞대응으로 긴장 고조

- 미국 정부는 7월 21일 휴스턴 주재 중국 총영사관에 대해 72시간 내로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중국 총영사관은 퇴거 시한인 7월 24일 오후 4시 직전 직원들을 철수시키고 폐쇄하였음. 미 국무부는 동 조치가 '미국의 지식재산권과 미국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휴스턴 총영사관이 중국인민해방군 출신의 학생들을 미국 대학에 파견하여 스파이 활동을 하도록 지휘하는 등 체제전복적인 행위에 개입한 역사를 갖고 있다고 발표함.
- 중국 외교부는 7월 22일 미국 정부의 조치가 국제관계와 국제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있다며 합법적이고 필요한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관영언론인 환구시보는 미국이 대선을 앞두고 중·미 관계의 긴장 수위를 높이려 한다고 비난하였음. 이어 7월 24일 중국 정부는 청두 주재 미국 총영사관*에 대해 72시간 내로 폐쇄할 것을 요구하였으며, 27일 오전 10시경 폐쇄를 완료하였음.
- * 청두 미국 총영사관은 중국 서부 지역에 최초로 개관한 외국 영사관으로 쓰촨성, 윈난성, 구이저우성, 티베트 자치구를 관할해왔음. 동 영사관은 티베트 자치구를 관할지로 두고 있는 유일한 외국 영사관으로, 동 영사관 소속 외교관만이 방문허가서 없이 자유롭게 티베트에 출입할 수 있었음. 또한 쓰촨성에는 중국 국영 군수기업의 사업장이 다수 위치하고 있어 청두 총영사관은 전략적·군사적으로 주요한 역할을 해온 것으로 보임.
- 미국 정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불법으로 규정하였으며, 중국 당국자 등에 대한 제재 가능성을 시사하고 **미·중 회계협정*** 파기를 언급하는 등 양국 간 갈등이 외교 분야를 넘어 경제·군사 분야까지 전방위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 2013년 미국 상장기업회계감독위원회(PCAOB)와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CSRC) 간에 체결된 MOU에 따라 중국 기업은 미 회계규정 준수 의무를 면제받아 왔으나, 7월 13일 미 국무부는 언론 인터뷰에서 이 MOU의 파기가 임박했다고 발언하였음. 동 MOU 파기 시 중국 기업의 미 증시 상장도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짐.



Ⅲ. 미국 정부의 조치가 홍콩 경제에 미치는 영향

(무역) 독자 관세 철폐시 홍콩에도 중국과 동일한 최대 25%의 관세율이 적용되나 홍콩 경제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 수준으로 전망

- 미국은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부여로 홍콩산 수입품에 대해 통상 1.6%의 관세율을 적용해왔으나, 이번 특별지위 박탈로 중국산 수입품과 같은 25%의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임.
- 그러나 홍콩의 상품수출 총액에서 미국으로의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7.6%이며, 이 중 이미 중국과 동일한 관세율이 적용되고 있는 중국 본토발 홍콩 경유 수출 제외 시 2% 수준에 불과하여 관세율 인상이 홍콩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또한 홍콩이 미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인 점(<그림1> 참조)을 고려 시, 오히려 미국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더 클 것으로 전망됨(<표4> 참조).
- 홍콩의 경제구조가 제조업보다는 금융, 물류 등의 서비스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높은 관세 부과는 제재조치로서 효과적이지 않다는 주장도 있음.

<표 4> 홍콩의 총수출 중 대미 수출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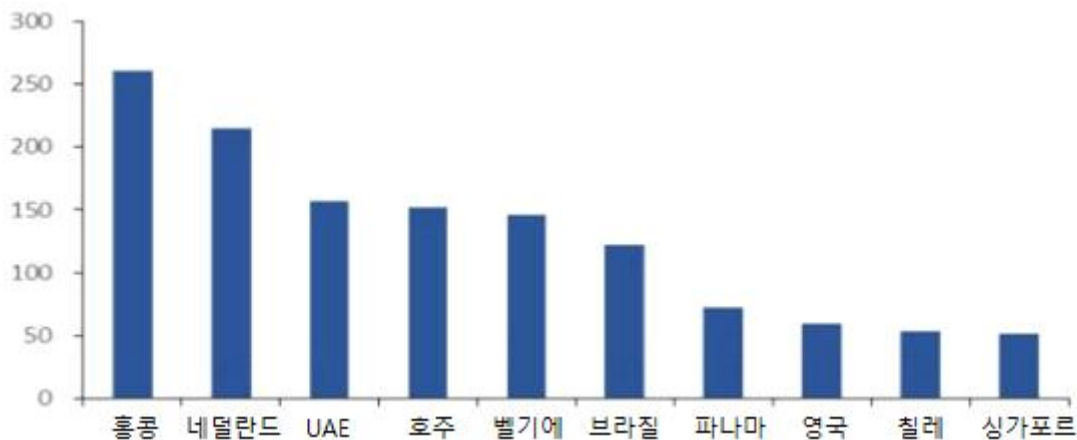
단위: 백만 홍콩달러

연도	총수출액(A)	대미 수출액(B)	비중(B/A)	대미 수출액 중 중국발
2015	3,605,279	342,193	9.49%	86.15%
2016	3,588,248	324,040	9.03%	85.40%
2017	3,875,897	330,198	8.52%	84.05%
2018	4,158,107	356,797	8.58%	81.95%
2019	3,988,686	304,004	7.62%	76.70%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그림 1> 미국의 무역흑자국 순위(2019년 기준)

단위: 억 달러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외환시장) 급격한 자본 유출 없이 홍콩달러는 페그제 구간 내에서 안정적인 강세 지속

- 미국의 각종 제재 방침 발표에도 홍콩 금융시장으로부터의 급격한 자본유출은 아직까지 관측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홍콩달러 환율은 안정적으로 페그제 하단*인 7.75 수준의 강세를 보이고 있음(<그림2> 참조). 현재까지 미국이 페그제를 약화시키는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홍콩은 GDP 규모 및 홍콩달러 총액 규모를 상회하는 외환보유액(<그림3> 참조)을 통해 페그제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 홍콩달러 페그제 band: 7.75~7.85HKD/US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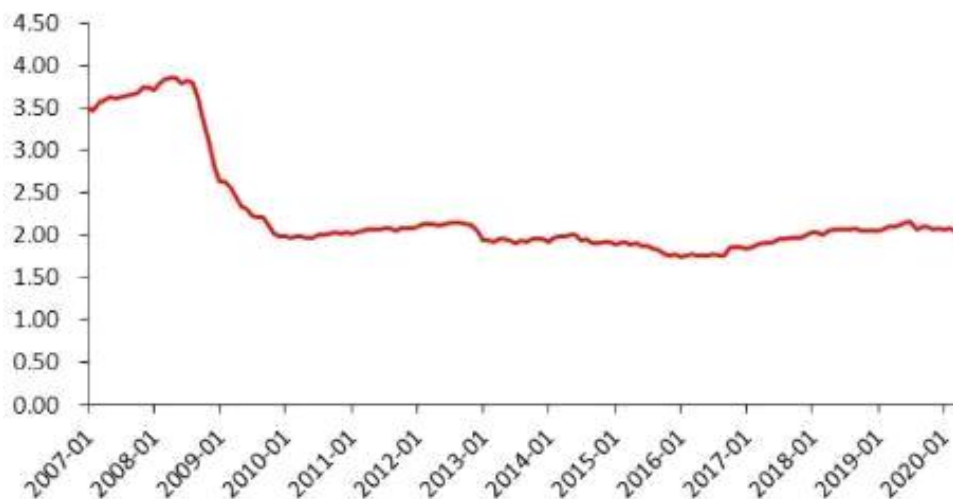
<그림 2> 홍콩달러화의 미 달러화 대비 환율 동향(2020.1~7월)



자료: 수출입은행 아주금융유한공사

<그림 3> 홍콩의 기초통화 대비 외환보유액 현황(2007.1월~2020.6월)

단위: 배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자본시장) 중국 기업들의 상장 수요 등을 바탕으로 홍콩 주식시장은 큰 변동 없는 상황

- 2020년 5월 20일 미국 상원의 '미국 증시에 상장된 외국기업의 경영투명성을 요구하는 법안' 가결로 중국 기업의 미국 증권거래소 상장이 어려워짐에 따라 홍콩 증시 상장(또는 2차 상장)이 그 대안으로 대두되고 있음(<표5> 참조).
-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Jefferies Group)는 중국 기업의 홍콩 증시 복귀로 최대 5,570억 달러가 홍콩에 유입될 것으로 전망하는 등 홍콩 주식시장을 통한 자금조달 수요가 증대되고 아직까지 별다른 자본 이탈 움직임이 없어 홍콩보안법 이슈 발생 후 주식시장에 급격한 변동은 나타나지 않고 있음(<그림4> 참조).
- 다만, 중장기적으로 홍콩 내 자산의 위험성이 높아지면서 향후 홍콩에 대한 외국인투자 유입이 감소하고 이를 대체하여 중국의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표 5> 최근 홍콩 증시에 상장된 주요 중국 기업

기업명	업종	조달금액	비고
SMIC	반도체	RMB 532억	'19.6월 나스닥 상폐 후 '20.7월 홍콩 상장
알리바바	전자상거래	HKD 880억	'14년 나스닥 상장. '19.11월 홍콩 2차상장
징둥	전자상거래	USD 38.7억	'14년 나스닥 상장. '20.6월 홍콩 2차상장
넷이즈	IT	USD 27억	'00년 나스닥 상장. '19.11월 홍콩 2차상장
*상장 예정	바이두(포털), 트립닷컴(여행), 핀뉘뉘(전자상거래), 시나닷컴(포털)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그림 4> 최근 3개월 간 홍콩 항셱 종합주가지수 추이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상해사무소



(기업 동향) 글로벌 금융기관 이탈은 제한적, 그 외 기업들은 일부 철수 가능성 예상

- 홍콩은 중국계 기업들의 자금조달 창구로 활용되어 싱가포르 등 경쟁 도시 대비 IPO, 채권, 신디케이트론 시장 규모가 월등하며, 홍콩에 지사를 둔 **글로벌 금융기관** 중 현재까지 홍콩에서 철수 또는 이전을 계획 중인 곳은 알려진 바 없음.
- 홍콩달러 발권은행인 HSBC와 SCB는 그룹 수익에서 홍콩을 비롯한 아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하며, 지난 6월 홍콩보안법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였음.
- 2020년 5월 말 기준 HKMA 등록 금융기관(Authorized Institution) 수는 193개로 전년 말(194개) 대비 거의 변동이 없음.
- 다만, 월버 로스 미 상무부 장관은 홍콩과 중국 간 관계가 변화함에 따라 홍콩에 아시아 본부를 둔 기업들이 홍콩에서의 철수를 고려할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하였음.
- 특히 표현의 자유 측면에서 직접적 영향을 받는 서방 언론기관은 홍콩 지국을 타국으로 일부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그 외에 가시화된 움직임은 아직 없음.
- * 뉴욕타임즈 지는 아시아 지역의 디지털 뉴스 등 일부 기능을 홍콩에서 서울로 이전한다고 발표

(금융허브 지위) 비즈니스 환경 악화에도 불구하고 아시아의 금융 허브로서 일정 수준 이상의 지위 유지 전망

- 2019년 하반기부터 본격화된 시위로 사회·경제 상황이 악화되며 2019년 홍콩의 **국제금융 허브 순위** (Global Financial Center Index)는 전년 대비 3단계 하락한 6위*를 기록하였음. 그러나 중국계 기관 자금조달 수요와 풍부한 유동성을 바탕으로 아시아 금융 허브로서의 홍콩의 위상은 당분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 1위 뉴욕, 2위 런던, 3위 도쿄, 4위 상해, 5위 싱가포르
- (IPO) 알리바바 등 중국 기업의 IPO가 활발한 가운데, 비중국계 기업도 아시아 상장 시 유동성이 풍부한 홍콩을 선호함.
- 싱가포르 대비 투자자군이 넓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상장 시 주가 결정(valuation)에도 유리하게 작용함.
- **홍콩 증권거래소**의 시가총액은 약 4.1조 달러로 아시아 제2의 금융 허브로 꼽히는 싱가포르 증권거래소(약 8,000억 달러)에 비해 5배 이상이며, IPO 규모 역시 2019년 기준 403억 달러(161건)로 싱가포르의 19억 달러(11건)에 비해 거래의 금액 및 건수 모두 월등함.
- (외화채권) 아시아 외화채권 발행시장에서 중국계 기관의 비중이 50%를 넘으며, 이들은 채권 발행 시 홍콩 시장을 활용함.
- 국내 기관이 외화채권 발행 시 홍콩 發 주문금액은 싱가포르 대비 약 2배 내외로 유동성이 풍부함.
- (신디케이트론) 중국계 수요가 활발한 가운데, 홍콩은 아시아 전체 신디케이트론 시장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중국의 미국 및 유럽 기업 대상 M&A 인수금융도 홍콩에서 다수 이루어짐
- 2019년 기준 신디케이트론 규모는 홍콩 1,375억 달러, 싱가포르 456억 달러 수준임.



IV. 전망 및 시사점

미·중 관계는 홍콩보안법 시행을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며, 미국 대선(11월) 등 감안 시 양국 간 갈등 지속 전망

- 보호무역주의와 미·중 패권 다툼이 2018년 3월 이후 **무역분쟁**으로 표출되면서 계속 악화되던 미·중 간의 갈등은 2020년 1월 1단계 무역합의 체결로 일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이후 코로나19 사태의 책임 공방, 미국의 중국 기업 제재 등으로 다시 악화 국면으로 전환되었으며, 최근 중국의 홍콩보안법 시행과 이에 대응하는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인해 극단적으로 고조되고 있음.
- 아직까지 양국 모두 **1단계 무역합의** 폐기는 부인하고 있으나, 현재의 갈등 상황을 감안 시 2단계 합의 가능성은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임. 7월 10일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게 손상되었으며 **2단계 무역합의**에 관심이 없다고 발언한 바 있음.
- 또한, 향후 홍콩보안법에 따른 중국 관리 및 금융기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제재 시행 수위에 따라 갈등이 증폭될 여지가 있음.
- 다만, 코로나19 사태로 양국 모두 경기 침체를 겪고 있으며, 특히 미국은 11월 대선을 앞둔 데다 국내 코로나19 사망자가 15만 명을 넘어서고 인종 갈등 시위가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자국에 미치는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따라 **무역합의 파기 가능성이나 홍콩보안법과 관련한 실질적 제재** 수준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전망도 상존함.
- 2019년 미국 기업의 자회사 1,400개사 이상이 홍콩에서 사업을 영위 중이며, 이중 절반 이상이 아시아 지역 본부 단위임. 미국의 홍콩 앞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2018년 기준 825억 달러에 이르고 매년 홍콩에 대하여 상품수지 흑자(2019년 260억 달러)를 기록 중임을 감안할 때, 홍콩에 대한 특별지위 박탈은 미국의 기업, 산업 및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치므로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부 실행과 제재 부과 등에서 점진적인 조치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홍콩을 세계 시장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해 온 중국의 대외경제 전략에는 악영향 불가피

-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로 관세와 비자 발급 등의 우대조치가 폐지되면서 글로벌 기업들이 홍콩을 무역과 금융의 허브로 이용하는 데 따르는 이점이 크게 훼손됨. 또한 미·중 갈등에 따른 불확실성 확대와 사회적 불안 등은 홍콩의 비즈니스 환경을 악화시키고, 홍콩을 세계 시장과의 연결 통로로 이용해 온 중국에는 경제적 손실을 입힐 것으로 분석됨.
- 2019년 기준 홍콩의 GDP 규모는 중국 본토 대비 2% 수준으로 미미하나, 2010~18년 중국 기업의 해외 증시 상장 중 73%가 홍콩 증시 상장이며, 같은 기간 중국 기업 역외채권 발행의 60%, 중국향(向) FDI의 64%, 중국발(發) FDI의 65%가 홍콩에서 이뤄지는 등 홍콩은 여전히 외부에 폐쇄적인 중국 본토 시장과 해외 시장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왔음.
- 또한, 미국 정부의 금번 행정명령으로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분야는 최첨단 신기술 영역으로, 홍콩을 통한 중국 내 기술 유입과 이를 통한 중국의 기술 발전 기회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됨.



현재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나 미·중 갈등 확대와 금융시장 불안에 대비 필요

- 우리나라 기업들의 대 홍콩 수출거래의 대부분은 그 최종 목적지가 중국으로 독자 관세 철폐 등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의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나, 중장기적으로 홍콩의 금융, 물류 허브 기능이 제한될 경우 기존 수출방식의 변화와 이로 인한 물류비 증가 등의 영향이 예상됨.
- 무역협회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대 홍콩 수출액의 114%(하역료, 보관비용 등을 포함한 금액 기준)가 제3국으로 수출되며 이중 98%가 중국으로 수출됨.
- **우리나라의 대 홍콩 수출규모**는 2019년 기준 319억 달러로, 홍콩은 중국, 미국, 베트남에 이어 4번째 수출대상국임. 특히 수출품목 중 **반도체**가 차지하는 비중이 69.8%(메모리반도체 55.5%)에 달함(<표6 참조>).

<표 6> 한국-홍콩 무역실적 추이

단위: 억 달러

구분	2019년					2020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연간	1분기	2분기
한국→홍콩	78	84	82	75	319	79	71
홍콩→한국	5	5	4	4	18	4	5
무역수지	73	79	77	71	301	75	66

자료: 한국무역협회

- 또한, 홍콩보안법을 둘러싼 미·중 갈등이 아직 우리 산업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는 않으나, 양국 간 갈등이 확대되고 무역분쟁이 전면전으로 치닫게 될 경우 상호 간 강도 높은 무역 제재로 이어지며 글로벌 무역이 감소하고 우리나라 경제와 수출기업에 타격이 예상됨.
- 미국의 홍콩 특별지위 박탈에 따라 **금융시장** 불안이 심화될 경우 아시아 신흥국 시장으로부터의 외국인 자금 이탈 흐름,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홍콩 증시 관련 ELS(주가연계증권)의 대규모* 손실 발생 등 우리나라와 홍콩 금융시장의 연관성을 고려할 때,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임.

* 2020년 5월 기준 우리나라 ELS 미상환잔액 기초자산 중 홍콩H지수가 55.6% 차지